김 총리 "통합 인센티브 지역 요구 가급적 다 담아낼 것"

민주당 통합특위 간담회…재정·공공기관 이전 등 지원책 논의

지역 의원들, RE100 산단·국립의대 유치·광역교통망 구축 요청

김민석 국무총리와 지역 정치권이 14일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에 따른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대규모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산업·기업유치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이날 김 총리를 통해 재확인됐고,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도 통합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 논의 등을 위해 대화창구를 총리실로 단일화 하고 수시로 지역 정치권·시도 등과 소통하기로 했다.

반면, '광주 쏠림 현상 우려' 등 통합에 따른 세부적인 문제도 지적돼 보안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르면 16일께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전남도당에 이어 광주시당도 이날 시도통합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민주당은 이르면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광주·전남은 최근 지역민의 관심이 굉장히 높고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민심도 상당하다"며 "오늘 의원들의 말씀을 잘 듣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와 지역 정치권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만간 통합 지원 특례 등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이날 건의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가급적 다 담아낼 수 있게 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 총리는 "광주·전남 통합은 기정사실"이라면서 "통합 인센티브에 재정과 권한 등을 담아내고 순차적으로 효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논의) 창구를 총리실로 하고 수시로 소통하자"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광주·전남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강조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통합에 따른 광역교통망 구축과 재정 지원, 예산 문제, 특목고 신설, 군공항 이전 국가주도, 문화산업 특구, 판다 유치에 따른 문화관광 육성 등을 요구했다. 광주 지역 일부 의원들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남 동부권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위기에 따른 RE100 산업단지 유치, 고흥우주모빌리티, 경전선 전철화(지하화)와 국립의대 유치 등을 요청했다.

통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남지역 일부 의원들은 통합에 따른 '광주시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권역별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농어촌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책 등을 요구했다.

또 과거 여수와 여천의 통합 과정에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고, 전남 동부 청사를 포함한 새로운 청사 문제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최다선인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이 "통합 절차가 남아 있으니 개별적인 요구사항과 문제 등은 따로 정리해서 양 시·도위원장이 일괄 처리하기로 하자"고 중재했다.

통합추진특위 공동위원장인 김원이(목포) 의원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데 대한 특별한 보상을 '어떻게 현실화할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당 정책위 산하 입법기획단이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양부남(서구을) 의원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의결을 거쳐 오는 6·3 지방선거를 광주·전남 통합 자치단체 선거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위 간담회에서 해당 지역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광주시당, 광주·전남 통합 당론 확정 '속도전' 선언

통합 추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당론으로 공식 확정하고 본격적인 '속도전'을 선언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4일 시당 대회의실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적극 추진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어 당사 앞에서 양부남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핵심 당직자와 당원이 집결한 가운데 '조속 추진 결의대회'를 열었다.

시당은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따른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 등 지방 소멸의 파고가 목전까지 닥쳤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찬반 논쟁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과 실행 뿐"이라고 강조했다.

시당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대폭 이양 받아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통합 추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시당은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약속은 공허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이에 따른 행정권한과 예산 구조 재편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속도'와 '책임'을 동시에 강조했다.

시당은 "(통합여론 수렴과 관련)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되,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시당위원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인 만큼, 민주당 광주시당이 통합의 마중물이 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어르신 95% 광주·전남 행정통합 찬성

빛고을노인건강타운 1008명 조사

46% "일자리 확충 인구 유출 완화"

광주 지역 어르신 10명 중 9명 이상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타운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회원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전남 특별 행정통합 관련 회원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5.0%인 959명이 행정통합 추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단 5.0%(49명)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96.0%(967명)가 통합 논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통합 이후 가장 기대되는 변화를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0%(464명)가 '청년 일자리 확충을 통한 인구 유출 완화 및 정주 여건 개선'을 1순위로 꼽았다. 이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자녀와 손자녀 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는 현실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이어 '의료·복지 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지역 간 격차 완화'가 20.0%(207명)로 뒤를 이었고, '광역 단위 전략 수립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15.0%·150명),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중복 비용 절감'(10.0%·98명) 순으로 조사됐다.

인공지능(AI) 등 국책 사업 유치와 재정 확보에 대한 기대감도 9%(89명)를 차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의회 통합대응 TF "의원수 인구대비 등가성 맞춰야"

현행 정수 단순 통합땐 불균형 초래

현 20명 43명으로 늘리는 방안 확정

광주시의회가 시·도 통합이 이뤄지면 광주 지역의원 정수를 현 20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광주시의회는 1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시의회 대응 TF' 제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TF 위원들은 현행 의원 정수대로 단순 통합되면 지역의원 수가 '광주 20명 대 전남 55명'으로 의원 정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인구 대비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면, 광주시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는 약 6만1000명인 반면, 전남도의원 1명당 대표 인구는 2만9000명 수준이다.

이에 따라 광주의원 수를 23명 늘려 43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마련됐다.

통합 특별시의회 소속 비례대표 의원 수는 총 98명(광주 43명 + 전남 55명)의 20% 수준인 20명으로 확정했다. 광주시의회는 이 안을 광주시에 제안해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담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TF 소속 박필순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 출범은 곧 특별시의회 출범을 의미한다"며 "강력한 권한을 가진 특별시장을 견제할 특별시의회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안평환 의원 주재로 열린 제169차 정책토론회에서는 광주의 정체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호남 대표 도시인 광주가 단순 5개 자치구로만 구성될 경우, 수도권·영남권과의 경쟁에서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선 9기는 기존 5개 자치구를 유지하고, 4년 후 민선 10기에는 자치구를 폐지하고 준자치구(행정구)를 도입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아울러, 특별자치단체 설립이나 '광주청' 설립 등 대도시 행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겨울철 일등분양식
청자골 자라양식장 창업 20주년 특별할인

고단백, 면역력 최고!
자라 엑기스 2개월분
①(12kg + 한약재)
②(12kg + 마늘 생강 대추)
70만원 → 60만원 (10만원 할인)

자라 요리 전문(단체모임환영)
자라탕·용봉탕 / 방생자라 판매
청자골 자라 양식장 | 061-434-0067 / 010-3635-3362
강진군 성전면 별뫼로 297-52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대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코어라이트(이하"을"이라 한다)는 2026년 1월 14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재산의 일부인 "소방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에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단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익일로부터 1개월내에 본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본점에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26년 1월 15일

"갑" **대진종합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7, 703호 (보정동, 하이프라자)
대표이사 박 헌

"을" **주식회사 코어라이트**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로188번길 74
사내이사 최 경 미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위진복(500218-1XXXXXX)
• **최후주소** : 광주 서구 금부로99번길 8, 202호 (금호동)

피상속인 망 위진복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느단4920호로 신청하여 2026년 1월 13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1월 15일

• **상속인** : 이영복(521111-2XXXXXX)
광주 서구 금부로99번길 8, 202호 (금호동)
• **신고기간** : 2026. 1. 15. ~ 2026. 3. 27.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이영복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배용순(510829-1XXXXXX)
• **최후주소** : 광양시 광양읍 은장도길 35-12 (광양읍)

피상속인 망 배용순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5느단5754호로 신청하여 2026년 1월 13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1월 15일

• **상속인** : 1. 박정숙(570130-2XXXXXX)
광양시 광양읍 은장도길 35-12 (광양읍)
2. 배영철(820212-1XXXXXX)
광양시 광양읍 은장도길 35-12, 3층 (광양읍)
• **신고기간** : 2026. 1. 15. ~ 2026. 3. 27.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2.배영철의 주소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74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